정책참고자료

2019-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 4

- 행안부, 전국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6

- 4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사회복지 관련 고충 상담 -

3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 10

- 관계 부처 11곳, 주관 기관 17곳과 업무 협약 체결 -

4 교육부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 15

-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 교육과정 이용 가능, 누리집 개편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험상황 감지하고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 21

- 다부처 협업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23년까지 260억 투입 -

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신규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지자체 3곳 선정 ——— 25

- 양평군(바이크), 평창군(동계올림픽유산), 하동군(드론스포츠)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 30

-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

8 환경부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 35

9 고용노동부

"취업난에 높은 학력 제쳐두고 기술 찾는 청년들" ——— 39
- 高학력 미취업자를 신산업분야 기술 인재로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 인기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44
- 2019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11 국토교통부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한다 ——— 52
-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

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 60
- 민·관·군 공조체제 강화로 긴급 상황 신속 대응 -

1 행정안전부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안부, 전국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 ○○시에서 현재 10여 년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상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현행화 된 상담자료 제공이 늦어져 민원인에게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못해 항의를 받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상담 자료를 현행화 하여 적기에 제공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깝게 생각했다.

❖ ○○○공단 콜센터는 업무특성상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상담원 B씨는 오늘도 민원인과 1시간 이상동안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민원응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전화를 끊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통화시간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에는 전화가 종료된다는 안내가 되거나 폭언·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에도 전화를 종료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한결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민원콜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발표**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근무여건개선 등을 대폭 개선**한다.

□ 전국 **118개 공공기관, 156개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조사('18.12.~'19.1.) 결과에 따르면, **상담 응대율은 89.5%**로, 상담원 1명당 **1일평균 54.5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상담원 수는 9,490명, 콜센터 1개 당 평균 51명 근무

< 운영현황 >

('18.12월말 기준)

기관	센터	운영방식	상담인력 (명)	연간 운영실적		연결음
				상담요청 건수(천건)	응대건수 (응대율)	
118개	156개	직영 50 위탁 100 (혼용 6)	총9,490 (평균 51)	126,873 (1인 1일평균 61.5건)	109,793 (89.5%) (1인 1일평균 54.5건)	152개 센터 (97.4%)

※ 콜센터 번호는 110(정부), 120(지자체), 112(범죄), 119(화재·구급·구조) 등 국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127개의 특수번호 외에 29개의 일반번호를 사용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음성 안내**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콜센터는 총 156개 센터 중 **40개 센터(25.6%)**였으며, 상담원 보호에 필요한 **녹음·녹취 안내는 98개(63%)** 센터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품질 측면에서는 각 기관의 **새로운 정책추진**이나 **정책 변경 시** 일시적으로 문의가 쇄도하나, **상담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해 응대가 곤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상담원의 전화 응대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어도 **친절유지를 위한 스마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별도의 **휴식 공간 부족**과 **고용 불안정** 상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상담원들의 고충 해소** 등을 통한 **민원응대 품질 수준 향상**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우선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에게 **상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행화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 각급 교육기관에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상담원의 건강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이민원에 대응 절차**, 상담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과 분리된 **휴식 공간 확보** 등을 해 나가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콜센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 올 하반기에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 특이민원 3단계 처리(1차**경고**→2차**ARS 전환**→3차**통화종료**), 상담원 **보호 강화**(힐링 프로그램 운영/ 포상 확대/ 휴식공간 확보), 상담원 관리 전문인력 운영 권고 등

○ 특히,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통화를 지연**(30분 초과)하거나 **언어폭력** 등 행사시 통화를 종료하고 상담원이 **추후 전화함**을 **고지한** 후 **상담을 종료**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상담원과 전화 연결 전, **민원인 정서안정**과 **언어폭력 자제 유도**를 위한 **감성통화 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부대표 포털('정부24')에 게시하고 전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 * **<사례>**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님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만족시키겠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가장 먼저 국민에게 전달**하는 **민원콜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각 기관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라며 "**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콜센터의 상담수준을 한층 높여서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110콜센터 및 120(서울, 대구) 콜센터 운영 현황

('18. 12월말 기준)

구 분	정부콜센터 (110)	다산콜센터 (120)	달구벌콜센터 (120)
구축·운영 시점	'07. 5월	'07. 9월	'11. 1월
운영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상담인력	250명	387명	45명
관리인력	7명 (4.5급1, 5급1, 6급이하 5)	19명 (1급1, 2급1, 3급1, 4급2, 5급7, 6급7)	3명 (5급1, 7급1, 9급 1)
'18년도 예산	88억원	242억원	151억원
설치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방식	외부민간위탁	외부민간위탁	외부민간위탁
상담시간	(과천) 평일 08시~21시 휴일 09시~13시 (영등포) 24시간	365일 24시간	평일 08~22시 휴일 09~18시
상담채널	전화, 문자, SNS, 화상, 수화, 외국어	전화, 문자, SNS, 외국어 5종	전화, 문자, SNS, 챗봇, 외국어 3종
일평균 상담건수	약 7,884건 (1인당 32건)	약 11,612건 (1인당 30건)	약 1,680건 (1인당 37건)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4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사회복지 관련 고충 상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4일(목) 13시부터 17시까지 서울 노원구청 통합방위상황실(지하1층)에서 주민들의 사회복지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민원수요에 맞추어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상담반을 구성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생계지원,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민원과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노동분야 민원은 물론 채권·채무, 민·형사 등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충이나 애로가 있는 주민은 특별한 준비 없이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여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 혁명 분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기관 협업 체계 구축”

- 관계 부처 11곳, 주관 기관 17곳과 업무 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11곳, 주관 기관 17곳과 합동으로 ‘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 관계 부처 업무 협약식’을 4월 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특허청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간 사업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청년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처 기관간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과 창업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자가 창업 사업화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 여성 특화, 소셜 벤처, 4차 산업 혁명 분야로 구분된다.

*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기계 장치 구입비, 무형 자산 취득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 지능), 문화체육관광부(관광), 산업통상자원부(VR/AR,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지능형 로봇, 사물 인터넷), 보건복지부(스마트 헬스케어), 환경부(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 해양수산부(에너지 신산업, 해양 신소재), 금융위원회(핀테크), 산림청(스마트 팜),

특허청(빅 데이터, 스마트 시티) 등의 관계 부처 11곳과 주관 기관* 17곳에서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도시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중기부의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부처별로 특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데에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주과학기술원 등 주관 기관 17곳에서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모집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주관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동안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설명회 일정 : (부산) 2019. 4. 12.(금) 14:00~15:30, 기술보증기금 본점 대강당
(서울) 2019. 4. 15.(월) 14:00~15:30, 한양대학교 HIT관 6층 대강당
(대전) 2019. 4. 18.(목) 14:00~15:30, 대전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참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개요

□ **사업 개요**: 예비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홍보, 상담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이용자에게 한도 금액을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이용자가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 업체로 이체

□ **지원 규모**: 1,010.5억원, 1,700명 내외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 **지원 내용**

○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예비 창업자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전담 상담자를 연결하여 사업화 자금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

○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40시간) 프로그램 운영

< 예비 창업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요 >

구분	교육 시간	교육 시기	운영 주체	교육 내용
사전 교육	8시간	협약 체결 전	전담 기관, 주관 기관	사업비 기준, 위반 사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역량 강화 교육	16시간	협약 기간 중	주관 기관	기업가 정신, 기술·경영 상담 등
심화 교육	16시간	협약 종료 시점	전담 기관	홍보 / 시장 조사 / 투자 / 상표 개발 중 창업 기업 희망 분야 택 1

○ 보증·투자·판로·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추진 절차**

참고2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관계부처 업무협약식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지난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추진하였던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이 올해는 명칭을 변경하여 예비 창업 패키지로 새롭게 출발

○ 각 부처가 협업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행사 개요

○ (행사 명칭) 2019년 예비 창업 패키지 관계 부처 업무 협약식

○ (주요 내용) 중기부 - 타 부처 간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의 기반 마련

○ (일시/장소) 2019. 4. 5.(금) 14:00~16:00, 드림플러스 강남*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지하1층

○ (참석자) 중기부 실장, 11개 부처*의 담당과장, 전담 기관(창업진흥원) 및 17개 주관 기관(붙임 참조)의 임원 또는 관계자 등 100여 명

*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산림청, 특허청

3. 세부 일정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3:30~14:00	'30	• 참가자 등록	
14:00~14:05	'5	• 주요 귀빈 소개 및 인사	
14:05~14:10	'5	• 사업 추진 경과 보고	
14:10~14:15	'5	• 주제 영상(예비 창업자 인터뷰 등)	
14:15~14:45	'30	• 주관기관 사업운영 방향 소개	
14:45~14:50	'5	• 마무리 말씀	
14:50~14:55	'5	• 기념 촬영	
14:55~15:55	'60	• 네트워킹(창업 기업 발굴·육성 정보 공유 등)	
15:55~16:00	'5	• 종료	

4. 부처 및 주관 기관 현황(4차 산업 혁명 분야)

연번	주관 기관명	주력 기술	부처명	부서명
1	광주과학기술원	인공 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2	미정(5월중 선발예정)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3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VR/AR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4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신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
5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소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7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물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8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10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 시티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11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 시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12	한국교통연구원	자율 주행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13	한국도로공사	자율 주행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너지 신산업, 해양 신소재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15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16	한국임업진흥원	스마트 팜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17	한국발명진흥회	스마트 시티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18	한국특허정보원	빅 데이터	특허청	정보관리과

4 교육부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 회원가입 없이 온라인 교육과정 이용 가능, 누리집 개편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5일(월)부터 학부모온(On)누리**(www.parents.go.kr)**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하였다고 밝혔다.**

○ **학부모온(On)누리 누리집**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누리망**(Web)과 **휴대용 단말기**(App)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녀교육에 필요한 **온라인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가입 절차가 번거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분야별 검색, 주제별** 추천 과정** 등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수증 발급 및 학습 계좌제와의 연계인 경우 회원가입 및 회원접속 필요

** 예비학부모, 부모-자녀 소통, 인성교육, 성교육 등 주제별 교육 묶음 제공

○ 또, 전자책(e-book) **교육 자료를 누리망과 휴대용 단말기에서 바로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를 위해 **6개 국어*** **자막을 2018년에 개발**한 **6개 교육과정부터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 누리집 **화면은**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뉴스, 전자책(e-book), 진로정보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고 자주 사용하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고, 제공되는 **동영상의 화질도 대폭 개선**하였다.

* 새로운 교육정책 바로알기, 학교혁신과 혁신교육지구 바르게 이해하기 등 40종 235차시 교육과정 탑재

○ 화면 상단의 온에어(ON-AIR) 단추*를 누르면 **실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비롯한 생방송을** 볼 수 있게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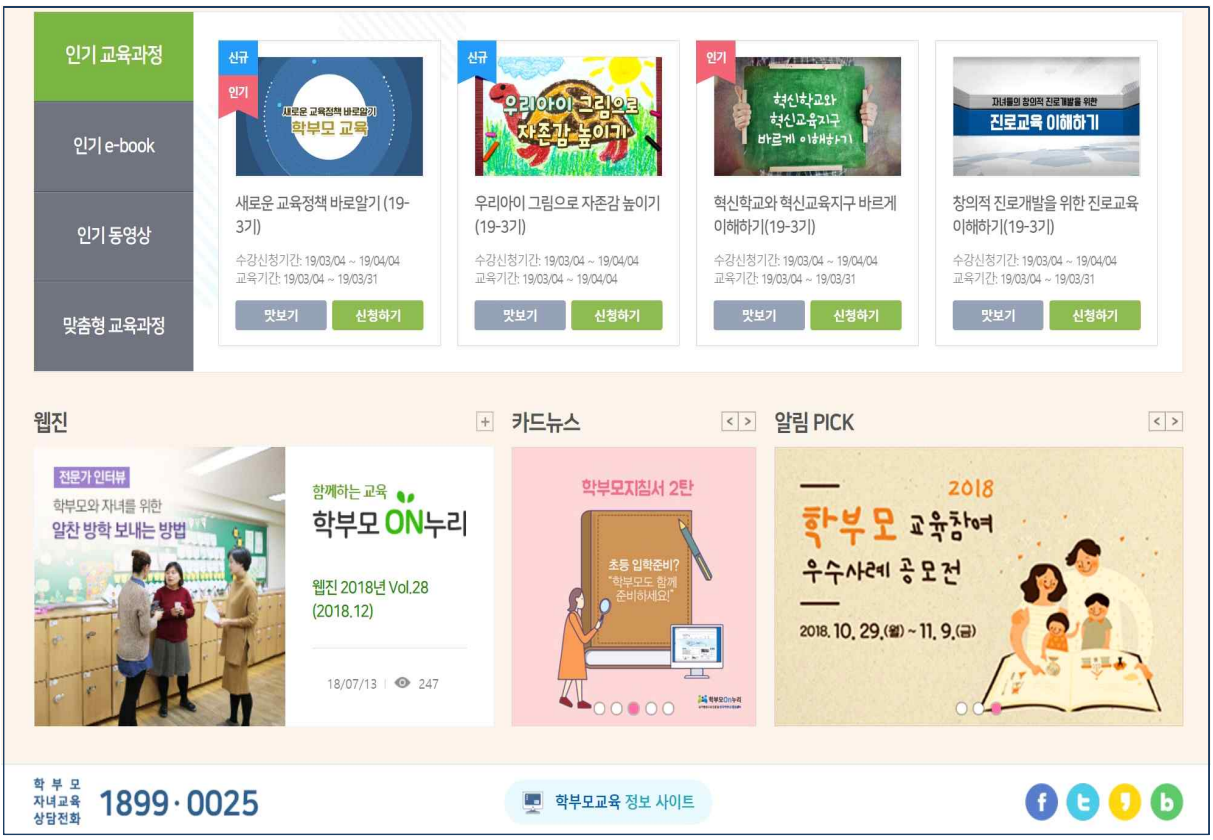
* 온에어(ON-AIR) 단추는 실시간 방송을 제공할 경우만 보이게 됨

- 이후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학부모온(On)누리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학부모온(On)누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교육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붙임】 1. 학부모온(On)누리(www.parents.go.kr) 누리집 개편 화면
2.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교육과정 현황

붙임1 학부모온(On)누리(www.parents.go.kr) 홈페이지 개편 화면



붙임2 학부모온(On)누리 온라인교육과정 현황

□ 자체 개발 콘텐츠 운영 현황(34종, 199차시)

※ 2018년에 개발된 온라인콘텐츠(과정명 음영처리)는 6개 국어(국, 영, 중, 일, 러, 베) 자막 운영예정('19년 3월~)

o 학부모 교육(6종, 38차시)

연번	과정명	주제	개발년도	차시
1	우리아이 유치원 보내기	유치원 선택방법, 유아교육 제도, 친구 사귀기, 대화법 등	2014	6차시
2	우리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입학준비, 학습방법, 학습습관, 독서교육 포인트 등	2014	10차시
3	우리아이 중학교 보내기	중학교 교육과정, 사춘기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완벽 대비 등	2014	6차시
4	우리아이 고등학교 보내기	고등학교 선택, 과목별 학습법, 진로설계 등	2014	6차시
5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자녀발달과정에 따른 성교육,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2018	5차시
6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자녀의 감정을 읽은 대화기술 감정코칭, 학교폭력 예방 관련 등	2018	5차시

o 진로진학(5종, 35차시)

연번	과정명	주제	개발년도	차시
1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학교수업 성공원칙, 학습계획, 자기주도학습 방법과 코칭 사례	2013	15차시
2	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진학지도	진로목표 설정,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설계까지 진로진학의 모든 것	2013	7차시
3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진로·직업교육	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특징, 관련 기술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방향	2017	4차시
4	아이와 함께 코딩을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코딩교육 설명, 체험프로그램 등	2017	4차시
5	자녀들의 창의적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이해하기	사회변화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 자기이해 활동 소개 및 분석법 등	2018	5차시

o 교육정책(8종, 44차시)

연번	과정명	주제	개발년도	차시
1	자유학기제, 학부모교육 매뉴얼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교과학습 등 자유학기제를 위한 가이드	2013	5차시
2	학습자를 사로잡는 강의법	교수설계, 수업전략 활용, 수업기술, 창의적 사고기법 등 효과적 강의법	2013	6차시
3	학부모 학교참여	교육참여, 교육기부 등 학교참여의 이해와 참여방법	2015	1차시
4	우리 아이 성적표 읽기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기본개념과 각 학교급별 성적표 이해 방법	2017	3차시
5	초등학교 보내기, 걱정마세요!	2017년 초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교과별 주요 개정 내용	2017	4차시
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보고·듣고·말하기	학교운영위원회 이해,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	2017	15차시
7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바르게 이해하기	혁신학교 정책 이해, 혁신교육지구 사례와 혁신학교 교육 소개	2018	5차시
8	새로운 교육정책 바로알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2015 개정 교육과정, STEAM 교육 이해하기	2018	5차시

o 창의 인성(4종, 24차시)

연번	과정명	주제	개발년도	차시
1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독서습관 만들기,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등 자녀의 독서활동 노하우	2015	5차시
2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예, 책임, 효, 정직과 소통, 존중, 배려와 협동 등 6가지 교육방법	2015	6차시
3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별 창의성 발달 과정 및 계발 노하우	2013	8차시
4	우리아이 그림으로 자존감 높이기	자녀 발달 단계별 그림의 특징, 그림을 매개체로 자녀 이해하기	2018	5차시

o 일반 공통(11종, 58차시)

연번	과정명	주제	개발년도	차시
1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비전 설정, 스트레스 극복 등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코칭	2013	5차시
2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안전지대와 비전 키우기 등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코칭	2013	6차시
3	우리아이 경제교육	용돈교육 등 스스로 돈을 통제, 관리하는 독립 경제인으로 키우기	2013	8차시
4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	자녀 공감대화, 적극적 경청법 등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 방법	2015	5차시
5	지혜로운 부모, 훌륭한 학부모	자녀의 발달단계, 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녀양육 방법	2015	5차시
6	가족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 부모-자녀, 배우자의 가족 등 다양한 가족간 갈등 해결방법	2016	5차시
7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자녀양육법 및 소통법	2016	5차시
8	초보 학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타임아웃, 방임과 자율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2016	5차시
9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비교, 과잉 조기교육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녀양육법	2016	5차시
10	사춘기가 된 내 자녀,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다.	사춘기 자녀의 특징과 올바른 자녀양육법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2016	5차시
11	아빠는 놀이쟁이	아이의 발달단계별에 따른 구체적인 놀이 체험	2017	4차시

□ 유관기관 개발 콘텐츠 공동 운영 현황(6종, 36차시)

o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발 콘텐츠(4종, 26차시)

연번	과정명	차시
1	아동부모교육	6차시
2	이계호 교수의 건강, 태초먹거리	5차시
3	자연치유와 푸드테라피	10차시
4	김종우 교수의 화 클리닉	5차시

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발 콘텐츠(2종, 10차시)

연번	과정명	차시
1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코칭의 이해	4차시
2	한국교육제도와 진학정보	6차시

5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위험상황 감지하고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 다부처 협업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23년까지 260억 투입 -

* (사례) 도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가로등

『봄비 내리는 오전 8시 50분, 야트막한 언덕 아래에 위치한 국토초등학교 앞 도로 건너편에는 수업시간에 늦은 이00 학생이 발을 동동거리며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임 부서장에게 보고할 사업계획 자료를 작성하느라 3일 연속 자정을 넘겨 야근한 최00 대리는 연신 하품을 하면서 빗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차선을 넘나들며 노란불 신호등을 연신 지나치기 위해서 오르막 도로에서 가속패달을 깊게 밟습니다. 』

1시간 뒤, 이00 어린이는 아빠가 사준 장난감을 자랑하기 바쁘고, 최대리는 부서장으로부터 좋은 아이템이라고 칭찬을 들은 뒤 정시 퇴근을 희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융합한 **인공지능 도로조명**은 과속, 급차로 변경 등 교통사고 **위험차량**을 **식별**하고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이동경로 상의 주변 차량, 신호등 및 도로조명에 **사고위험 정보**를 **전파**합니다. 이 정보를 받은 횡단보도에 설치된 도로조명은 **차세대 LED 조명기술**을 활용한 **횡단보도 발광 표시장치**와 **디지털 사인**을 이용해 어두운 도로 위에 선명한 횡단보도와 위험차량 접근 안내 문구·음성을 나타내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최00 대리 차량에는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방 300m 내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리고, **디지털 사인**을 이용해 감속유도 및 전방 횡단보도 위치를 안내합니다. 또한 빗길과 속도로 인해 최대리의 차량이 제동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인공지능 엣지컴퓨터**는 인근 교차로 신호등을 적색으로 전환해 추돌사고를 예방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자부') 및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이하 R&D)'**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연구개발(R&D) 분야의 부처 간 협업과 기술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임

○ 본 사업은 도로상 가로등의 기능을 불빛만 비춰주는 단순한 조명이 아닌 **각종 도로환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23년까지 4개 부처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 사고, 정체, 결빙, 교통량, 보행자 경로, 차량 이동방향 및 속도, 가감속도, 차량 역주행, 낙하물, 포트홀 등

○ 이는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상 **위험상황**을 **직접 수집·판단**하여 '디지털 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I2X*기술**로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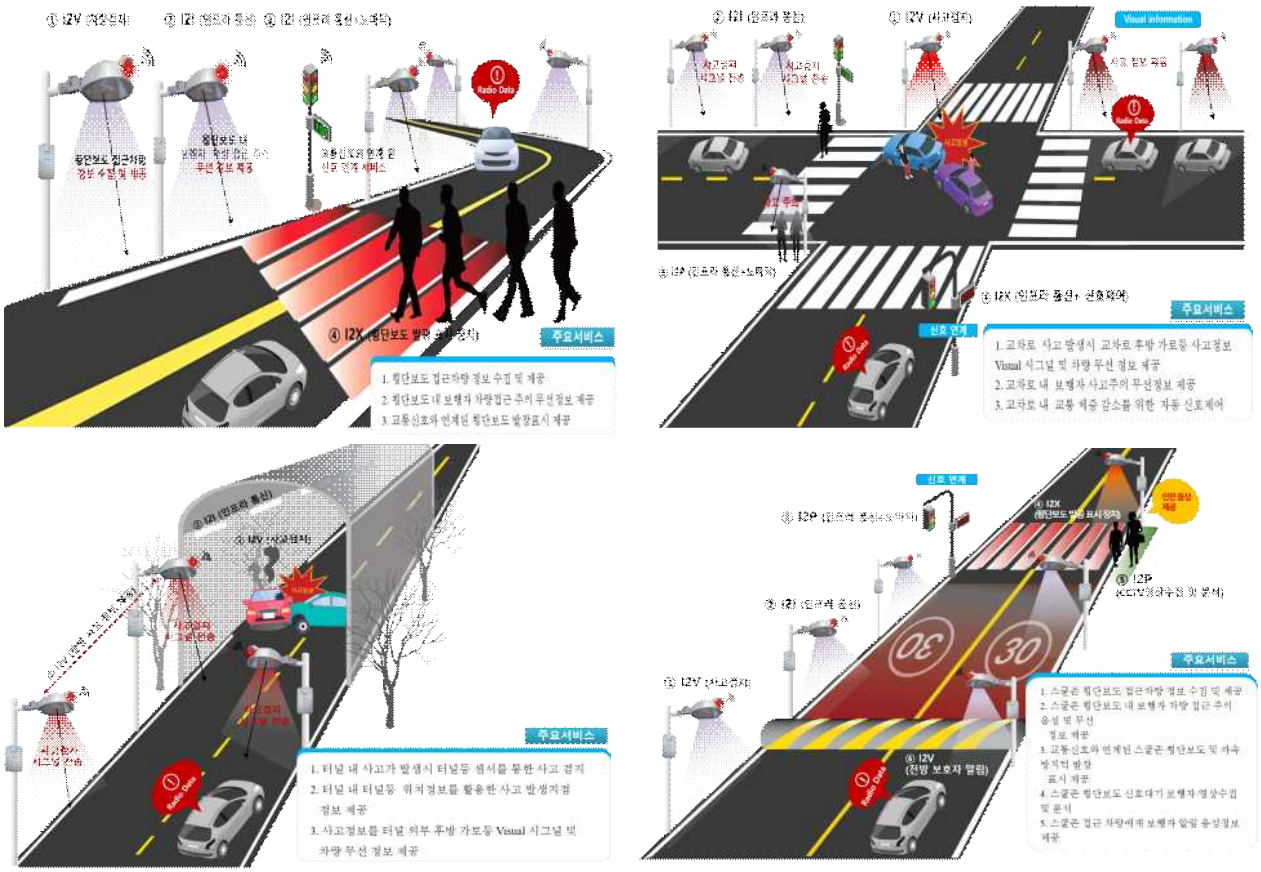
* Infra to Thing의 약자로 인프라(도로변 기지국 등)와 사물 간 무선통신을 의미

○ 횡단보도나 교차로, 터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국토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처리·통신 플랫폼**(과기정통부), **멀티센서 융합 도로조명 시스템**(산업부), **도시재난안전관리 연계기술**(행안부) 등 부처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부처의 역할 및 의견을 꾸준히 조율해왔으며, 올 3월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관리계획, 공동관리규정 등 5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스마트 도로조명 예상 서비스 형태>



□ 또한,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관에 사업의 내용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R&D) 사업설명회**를 4월2일(화) 14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회의실(9층)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다부처 R&D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을 소개하고 신규 과제 선정절차.지원요령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스마트 도로조명 R&D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선정평가	⇨	과제협약	⇨	연구수행
‘19.3.22		’19.04.02		’19.04 말		’19.05 중순		’19.05～’23.12

*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국도.광역시도 등 도심 내 사고 다발지역에 맞춤형 **안전 컨트롤 타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시범 적용**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 문화체육관광부

2019 신규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지자체 3곳 선정

- 양평군(바이크), 평창군(동계올림픽유산), 하동군(드론스포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9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신규 대상지로 ▲ 경기도 양평군[바이크 파크(BIKE PARK)], ▲ 강원도 평창군(동계올림픽유산), ▲ 경상남도 하동군(드론스포츠) 등, 지자체 3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스포츠자원과 지역별 관광자원 등이 융·복합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곳당 3년간 국비(기금) 15억 원(연간 5억 원씩, 지방비 50% 자부담 조건)이 지원되고,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11곳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2017년 이후에 선정된 5곳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 3곳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스포츠관광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교육·문화 특구, 양평군

▲ 양평군은 2018년 새로 건립한 양평종합운동장 내에 '양평 바이크파크(BIKEPARK)'를 조성하고, 펌프 트랙, 비엠엑스(BMX)* 경주로(레이싱

트랙) 및 로드자전거 트랙 등을 설치해 자전거 축제와 체험 등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정보기술(IT) 기반을 구축, 실시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는 자전거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해 자전거 교육·문화 특구를 조성한다.

* 비엠엑스(BMX): 거친 노면에서도 탈 수 있는 튼튼한 자전거

동계올림픽유산, 평창군

▲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기반시설과 연계해 스키점프장 시설을 활용한 '레드불 대회', 슬라이딩센터·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경기장을 활용한 '신철인 3종 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스포츠관광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드론스포츠의 시작, 하동군

▲ 하동군은 드론을 활용한 미래형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세계적인 비행기 경주대회 '에어 레이스(Air Race)'를 참고하여 개발한 '하동 슈퍼레이스'가 노량대교 앞바다에서 펼쳐지고, 전국 동호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코리아 마스터리그'도 연중 운영한다. 또한 세계적인 조종사가 참가하는 하동 지역 드론 경주(레이스) 관광을 통해 드론스포츠의 중심으로 도약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스포츠프로그램을 지원해 관광자원과 융·복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신규 선정된 지자체 추진 사업 관련 사진자료

붙임1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관련 사진자료

1. 경기도 양평군(BIKEPARK)

<table>
<tr><td>
</td><td> </td></tr>
<tr><td>양평 BIKEPARK & Academy 조감도</td><td>펌프 트랙</td></tr>
<tr><td> </td><td> </td></tr>
<tr><td>BMX 레이싱 트랙</td><td>로드 트랙</td></tr>
</table>

2. 강원도 평창군(동계올림픽레거시)

<table>
<tr><td>
</td><td> </td></tr>
<tr><td>사업계획 조감도</td><td>레드불 그물오르기</td></tr>
<tr><td> </td><td> </td></tr>
<tr><td>크리스탈 텀</td><td>익스트림 레저 3종경기</td></tr>
</table>

3. 경상남도 하동군(드론스포츠)

<table>
<tr><td> </td><td> </td></tr>
<tr><td>경기장 조성 예상도</td><td>국내개발 1m급 기체(슈퍼레이스용)</td></tr>
<tr><td> </td><td>
</td></tr>
<tr><td>FPV 드론 레이싱</td><td>DCL(유럽리그)</td></tr>
</table>

붙임2 2014~2018년 선정 사업 내용

○ 2018년(3개 사업)

사업주체	선정 사업 내용
기장군	**야구** 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밀양시	**MY(Miryang Yoga)** 웰니스포츠 MICE Tour (**밀양 요가** 웰니스포츠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보은군	지역특화 **육상**토탈 매니지먼트 사업(육상훈련 관광체험)

* 당초 4곳을 선정하였으나 의성(컬링)은 2018년 사업 연차평가 결과 사업부진으로 탈락

○ 2017년(2개 사업)

사업주체	선정 사업 내용
삼척시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육성 프로젝트
예천군	**활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 2016년(3개 사업)

사업주체	선정 사업 내용
고성군	고성 **바이크** 어드벤처
청송군	4D **Ice Climbing**(4D 빙벽 등반)
전주시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드론축구** 용품 개발 및 드론축구 협의회 발족

○ 2015년(4개 사업)

사업주체	선정 사업 내용
제천시	제천시와 함께 하는 힐링레포츠 투어
춘천시	춘천 SPO-TOUR S.E.T 프로그램
영월군	레포츠 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청주시	청주 스포츠 힐링투어

○ 2014년(4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사업주체	선정 사업 내용
백석대 산학협력단	아름드리 힐링 & 러닝콘서트 사업
동양대 산학협력단 → 영주시	유불문화관광 스포츠클러스터 사업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무주)	무주태권도원 소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대중화 사업
전라남도체육회	전남 스포츠과학의료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당지급 121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18.8. ~ 11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예산(억원): ('14) 3,526 → ('15) 3,156 → ('16) 3,038 → ('17) 3,020 → ('18) 2,496

○ 이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 보조사업 집행 ·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보조금 지원규모('18년 기준) : 전북 > 충남 > 전남 > 경남 순

□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 반납**, 5천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 그밖에, 복합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사업계획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 셋째,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17.7월 개통)

○ 넷째,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2. 제도개선 방안

붙임1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유 형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부적격자 보조금 지원 (16건)	• **출자금**(1억원 이상) **또는 사업실적**(1년 이상) **부족,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등 지원요건 미충족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 출자금 확보,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요건 보완 • 일정규모(자본금 80억원, 근로자 300명) 이하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해야 함에도, **중소기업이 아닌 ㈜OOO***에게 **보조금 지원**(9.2억원) * ('15년말 기준) 자본금 1,217억원, 매출액 3,928억원, 근로자 622명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사업부지 미확보 토지에 건물 신축, 공모절차 미준수 (19건)	•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명의의 부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자기 토지 없이 약식 토지사용승낙서만 구비**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하여 건물 신축** ☞ 사업부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적 권리 취득 조치 등 • **정식 공모절차 없이 市 주도로 사업관계자 모집**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개별농가 보조금 지원, 중복 지원 (15건)	• 법인·조합 및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 농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개별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 3년 이내에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됨에도 **사업효과성 평가 없이 동일 사업자에게 2차례 이상 보조금 지원**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부가가치세 미환수 (44건)	• 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반납하거나 재투자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에 투입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4.4억원 상당의 국고손실 초래** ☞ 부가가치세(4.4억원) 환수 또는 재투자 절차 추진
계약절차 미준수 등 (9건)	•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 관련 공무원 비위사실 지자체 통보
임의 담보제공, 중요재산 미등기·미공시 등 (18건)	• ㈜OOOO은 보조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道의 승인 없이** 동 건물을 **임의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음** ☞ 담보 해제조치, 담보제공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기계 등 중요재산 미공시 등** ☞ 보조사업자 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중요재산 홈페이지 공시

붙임2 제도개선 방안

1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시 한
① 보조사업자 선정 체계 개선	■ 농가 기본설비 취득 등 일반 사업*에 보조금 집행 * 복합산업화 지원취지에 부적합	■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심사(지침 반영)	■ '19.10.
		■ 복합산업화 및 소득·고용 증대 관련 심사배점 상향 (지침 반영)	■ '19.10
② 보조사업자 경영능력 향상	■ 보조사업자의 경영 및 위기관리 능력* 부족 (→매출 정체) * 제품 브랜드화, 자금조달, 판로개척	■ 현장 코칭 활성화로 애로사항 신속 해결 (농식품부, 지자체)	■ '19.10.
		■ 경영지원 프로그램 제공, 창업 및 판로 지원 확대	■ '19.10.
③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매출액, 고용자 수, 방문자 수 등 경영실적 정보수집 인프라 및 성과평가 체계 미흡	■ 경영실적 수집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 (농식품부, 지자체)	■ '19.10.

2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시 한
①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원자격 미충족자 지원, 중복지원 사례 발생 ■ 정산보고서 미제출, 중요재산 미공시 등	■ 현장점검(연1회)	■ 계 속
		■ 자격요건 자가점검표 작성 의무화(지침 반영)	■ '19.10
		■ e-나라도움, 관련 법령, 감사 지적사례 등 교육 (연1회)	■ '19.10.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절차 구체화	■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반납 누락 사례 발생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매뉴얼 보완 및 교육 (농식품부, 지자체)	■ '19.6.
③ 사업부지 확보요건 명확화	■ 타인 명의의 토지에 단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자에게 건물신축 지원 사례 발생	■ 본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확보한 경우 건물신축 지원 (훈령·지침 반영)	■ '19.6.

※ 재정분권 추진방안(지방세 확충 및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 지방이양)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8 환경부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19. 6. 25.)을 앞두고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다.

○ 절수효과 3등급 기준은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 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요금 85억 원 절감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 '18년)

□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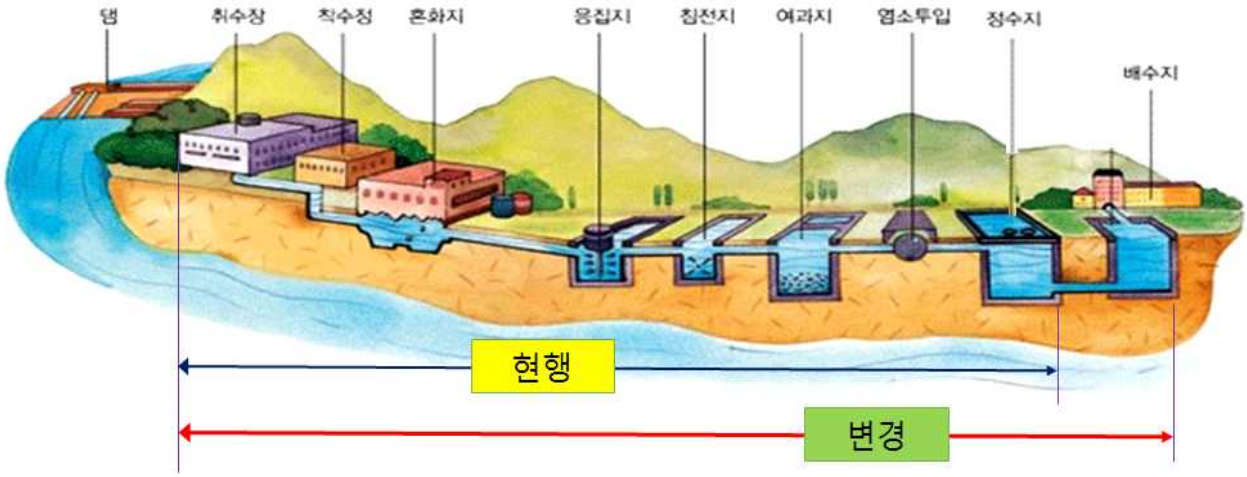
*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으로서 잔류염소농도×접촉시간으로 판단

○ 이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설치한 정수장에 한해 적용한다.

○ 더불어,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정수처리기준 준수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희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Ⅰ 시행령 개정내용

□ 절수설비 **등급 거짓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 **(개정내용)** 법률*(수도법 제87조) 상 과태료(500만원)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 규정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제87조제5항)

**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위반부터: 500만원

Ⅱ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절수설비 등급구분 및 표시방법 신설**(제4조 및 별표2의2 신설)

○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19.6)을 위한 절수 성능 **세부 등급기준***(3등급) **도입**

* (대변기) 1등급: 4리터 이하, 2등급: 5리터 이하, 3등급: 6리터 이하
(소변기) 1등급: 0.6리터 이하, 2등급: 1리터 이하, 3등급: 2리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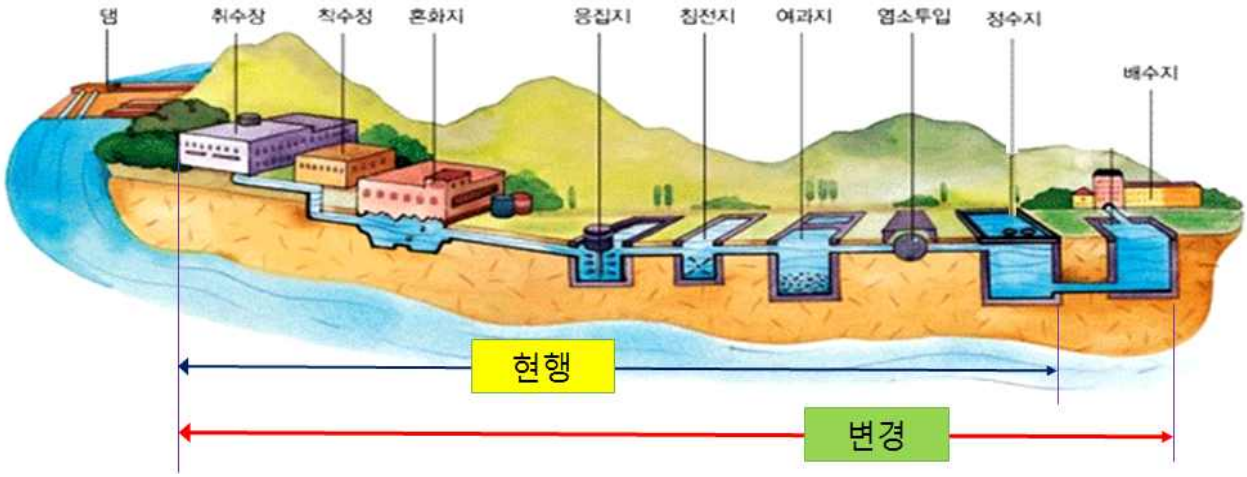
□ **현장여건 고려**한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준수방법 개선**(제18조의2제3항)

○ 현재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토록 개선*

- 다만, 기준준수여부 철저 확인을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pH, 잔류염소 등) **설치 정수장에 한해 적용**

*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 체류시간이 짧아 現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제 개선

<※ 참고 정수처리기준 준수구간>



□ **정수장 내 탁도 검사 방법 개선**(별표5의2)

○ 탁도 검사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의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토록 하는 **現채취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장 구조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문제점 개선

□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 합리화**(제22조의3)

○ 현행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기준(잔류염소, pH, 탁도) 중 탁도 항목 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개정(1NTU → 0.5NTU)

□ **기타 자구 수정** : 타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제31조)

붙임2 전문용어 설명

○ **(절수설비)**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기준을 만족하여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는 양변기, 수도꼭지를 말하며,

- 절수기준은 양변기의 경우 공급수압 98kPa에서 1회 사용수량이 대변기는 6L, 소변기는 2L 이하이며,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분당 6L이하

○ **(정수처리기준)** 소독내성이 강한 병원 미생물(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이며, 병원성 미생물이 99.0% 이상 제거(바이러스 99.99% 이상, 지아디아 포낭 99.9% 이상,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99% 이상)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9 고용노동부

“취업난에 높은 학력 제쳐두고 기술 찾는 청년들”
- 高학력 미취업자를 신산업분야 기술 인재로 양성하는 하이테크과정 인기 -

□ 지난해 **대졸자 취업률은 66.2%**로, 3명 중 1명은 **‘고학력 미취업자’**로 나타났다. **높은 학력은 제쳐두고, 기술로 취업의 벽을 넘으려는 청년들**이 있어 이목을 끈다.

○ 폴리텍은 **2016년 하이테크과정을 도입**했다(2016년은 시범운영).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 변화에 따라 학과를 신설·개편**하면서 **고학력자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췄다.

《전문기술과정 및 하이테크과정 비교》

구분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목적	뿌리, 기간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	신기술 및 융합기술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형 인력 양성
입학자원	15세 이상 미취업자(나이제한 없음) 우선선발대상(사회안전망)	대졸이상(고학력) 미취업 청년
주요직종	뿌리, 기간산업 중심	신기술 중심 및 융합직종
교육특징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하는 방식	수준별 유연한 과정 운영을 위해 모듈형 교과(기초, 심화, 특화) 편성
교육수준	NCS Lv. 2~3	NCS Lv. 4 이상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취업률 현황》

(단위: %)

구분	'16학년도	'17학년도 1기 ('17년 12월 수료생 기준)	'17학년도 2기 ('18년 6월 수료생 기준)	'18학년도 1기 ('18년 12월 수료생 기준)
합계	92.3	91.5	89.1	92.7
데이터융합SW	90.9	82.4	88.2	94.1
생명의료시스템	95.8	100.0	100.0	88.9
임베디드시스템	89.5	92.3	80.0	95.0

* 18학년도 1기 취업률 기준: '19.3.25.

□ 올해 하이테크과정은 595명 모집에 1,757명이 지원했다. **평균 경쟁률**은 **2.95:1**을 기록했다. 2017년 정규과정 편성 이래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7-2019 하이테크과정 모집 경쟁률》

(단위: 명)

구분	모집정원	접수인원	경쟁률
2017	565	1,118	1.98 : 1
2018	545	1,194	2.19 : 1
2019	595*	1,757	2.95 : 1

* '19년 교육인원 775명 중 595명 부분 선발 진행, 학사운영규칙에 따라 입학인원은 모집정원의 110% 이내로 하여 610명 입학

○ 특히, 성남캠퍼스 생명정보시스템과(5.76:1), 융합기술교육원 생명의료시스템과(5.45:1), 인천캠퍼스 전기에너지시스템과(3.96: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 한편, **입학자의 학력도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전문대학 학력 소유자는 줄어든 반면, 4년제 대학 학력 소유자는 증가**했다.

《2017-2019 하이테크과정 입학자 최종학력》

(단위: 명, %)

연도	계	전문대학	4년제대학 이상
2017	520	201 (38.7)	312 (60.0)
2018	538	169 (31.4)	364 (67.7)
2019	610	169 (27.7)	424 (69.5)

□ **인문계 전공자의 교육 참여**도 눈에 띈다. 올해 인문계 전공자 비율은 43.0%로, **5명 중 2명꼴**이다.

○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공학계열 취업률은 70.1%로 평균을 웃돌았다. 인문계열은 56.5%로 전체 중 가장 낮았다. **인문계 전공자의 기술교육 참여는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다.

《2019 하이테크과정 입학자 최종학력 전공계열》

(단위: 명, %)

계	인문계	이공계	기타
610	262 (42.9)	347 (56.9)	1 (0.2)

□ **여성의 직업교육 참여**도 눈여겨볼만하다. 지난해 여성 입학자 비율은 20.4%인 반면, 올해는 **28.2%로 증가**했다.

○ **전문기술과정(직업훈련과정) 보다 18.5%p 높은 수치**다. **뿌리·기간산업 직종에 비해 여성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폴리텍 관계자는 “융합 기술이 집적된 신산업분야는 섬세함과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 여성 친화적이다”고 설명했다.

《2018-2019 전문기술/하이테크과정 입학자 성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계	남	여	계	남	여
2018	5,148	4,702 (91.3)	446 (8.7)	538	428 (79.6)	110 (20.4)
2019	4,797	4,331 (90.3)	466 (9.7)	610	438 (71.8)	172 (28.2)

* 전문기술과정 입학자는 6개월 이하 단기과정 포함

□ **입학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만29세 이하 입학자는 '18년 65.0%에서 '19년 74.1%로 크게 늘었다. **취업난에 직업교육으로 과감히 선회**하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2017-2019 하이테크과정 입학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도	계	만29세이하	만30~39세	만40세이상
2018	538	350 (65.0)	130 (24.2)	58 (10.8)
2019	610	452 (74.1)	108 (17.7)	50 (8.2)

□ 폴리텍은 신산업분야 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이테크과정도 점차 늘려 나간다. 2018년 20개 과정의 545명 교육 규모를 **2020년까지 38개 과정에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2018-2020 하이테크과정 운영계획》 (단위: 명, 개)

구분	2018	2019	2020
인원수	545	775	960
과정수	20	30	38

□ 이석행 이사장은 "사회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며 "신산업 기술 교육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 올려 일하고 싶은 청년과 현장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붙임〉 하이테크과정 운영 학과 현황

참고 하이테크과정 운영 학과 현황

(단위: 명)

캠퍼스	학과	직종	'16	'17	'18	'19
계			300	565	545	775
서울정수	모바일정보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25	20	25	25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25
서울강서	정보보안	정보보안	30	25	25	25
	출판편집디자인	출판	25	25	25	50
	스마트금융	핀테크		30(*)	25	25
성남	자동화시스템	ICT응용제어	25	20	25	25
	생명정보시스템	바이오제약	25	20	25	25
융합기술 교육원	데이터융합S/W	응용소프트웨어	30	40	40	40
	생명의료시스템	의료바이오	30	40	40	40
	임베디드시스템	임베디드	30	40	40	40
인천	기계시스템	기계설계제작		20	25	
	전기에너지시스템	전기시스템제어	25	20	25	25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25	
제2 융합기술 교육원	데이터모델링	빅테이터분석				20
	에너지시스템	스마트에너지				20
	바이오융합시스템	바이오의약품				20
	3D제품모델링	3D프린팅				20
	증강현실시스템	가상현실(VR)콘텐츠				20
화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자동차				20
춘천	반도체표면처리	반도체표면처리		25		
원주	의료공학	의료기기설계				25
대전	스마트소프트웨어	스마트소프트웨어		20	25	25
	전기전자제어	전기시스템제어		20	25	25
	VR미디어콘텐츠	가상현실콘텐츠제작				20
아산	IoT정보보안	IoT정보보안				20
광주	전기	전기시스템제어		20	25	25
대구	스마트자동화	스마트팩토리		30(*)	25	25
	컴퓨터응용기계	첨단소재부품가공		20		
달성	스마트전자	IOT제어				25
창원	컴퓨터응용기계	밀링(머시닝센터)		20	25	25
섬유패션	하이테크소재	하이테크소재			25	25
	클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25	20	25	25
바이오	바이오배양공정	바이오배양공정	30	60		
신기술 교육원	스마트에너지	EMS/ESS		30(*)	25	25
	스마트자동화	스마트팩토리				20

※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진행 중으로 19학년도 정원은 개원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 (*) 표시는 단기과정

10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2019 청소년쉼터 · 자립지원관 · 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특화·확대하여 올해 7회 실시한다.

< 청소년복지시설 >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 시설 종류 >	< 지원 서비스 >
● **청소년쉼터**	▸ **(목적)**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 ▸ **(현황)** 130개소('18년) → 138개소('19년)
● **청소년자립지원관**	▸ **(목적)**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시설 ▸ **(현황)** 4개소('18년) → 6개소('19년)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6개월) ▸ **(현황)** 20개소('19년 최초 국비지원, 신규)

▸ **(안내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지역번호+1388
-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가능

○ 첫 교육은 **4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이틀 간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 **종사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연차 및 직무 등 대상별*로 특화**하고, **집합연수를 두 배로 확대**('18년, 3회→'19년, 7회) 실시한다.

○ 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역량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상별 : 시설장, 중간관리자, 기존직원, 신규 직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

- **상담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가출, 우울증, 분노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대응 및 관계개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복지**분야에서는 **취업·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교육한다.

□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자기이해, 가치관**을 알아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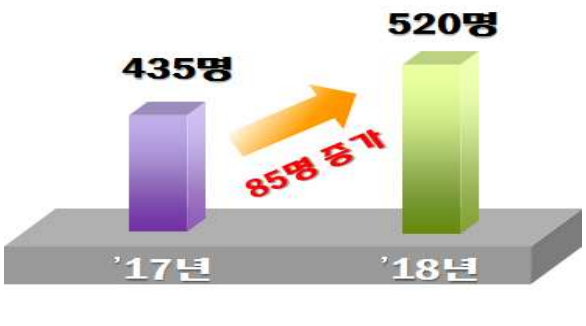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019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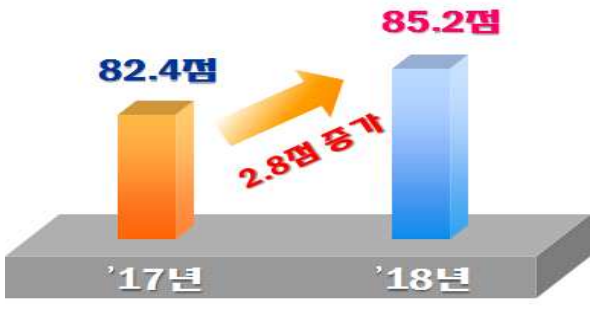
회차	교육일정	대 상	인원
1차	4.4.(목)~4.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2차	5.2.(목)~5.3.(금)	중간관리자	110명
3차	6.20.(목)~6.21.(금)	신규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4차	7.4.(목)~7.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5차	8.12.(월)~8.14.(수)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	120명
6차	9.20.(금)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130명
7차	11.14.(목)~11.1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 **'18년도 종사자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쉼터 및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수료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3.3%**(2.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료생들은 다양한 사례별 대처방안 및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수료 인원>



<교육수료 후 만족도>

□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

이라며,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종사자 대상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1. ‘19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개요
2. 청소년복지시설 개요

붙임1 **'19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개요**

1 교육 운영 방향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대상별 구분 분리·운영으로 시설간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시설장, 중간관리자, 기존 및 신규종사자 등

○ 격년제 집합교육 운영 및 원격연수(이러닝)의 활성화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 부담 완화

○ 지자체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 주관 집합연수 또는 원격연수 참석 포함 또는 자체 교육 가능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18년(AS-IS)	'19년(TO-BE)
내용	ㅇ **집합연수 3회** ㅇ **상담분야 위주** -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해 - 청소년 위기 심리평가 등	ㅇ **집합연수 7회** ㅇ **상담분야 교육과정 확대** - 심리검사 및 MBTI를 통한 관계개선 교육 - 위기청소년 분노조절·품행장애 대응방법 등 ㅇ **복지분야 교육과정 추가** - 사례관리 개입 방법 - 자원발굴 및 연계 활성화 방안
과정	ㅇ **통합 강의 진행**	ㅇ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시설장(1박2일 → 당일) - 중간관리자, 기존 및 신규직원 ㅇ **격년제 교육 도입** - 집합연수 : 격년제 (단 시설장은 제외)

2 교육 과정

1. 집합 연수

○ 교육인원 : 약 800명 이내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 680명(6회)

  * 시설장(당일), 종사자(1박2일 집합연수)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120명 이내(남,여 각 1회)

  * 종사자 및 청소년 연합캠프(국립청소년해양체험센터 위탁)

○ 교육과정

- 공통과정 :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지침, 소진예방 워크숍 등
- 선택과정 :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
  . (시설장) 청소년복지정책 동향, 청소년 인권교육 등
  . (중간관리자) 위기청소년 대응 상담개입방법, 인성교육 등
  . (기존직원) 상담과 심리치료 이해 및 개입방법, 활용법 등
  . (신규직원) 위기청소년 관계개선 방법, 시스템 활용 교육 등

2. 원격 연수

○ 교육대상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 교육과정 : 52종(가출청소년 상담 및 개입 등)

* 1과정당 4차 또는 5차로 구성(총 교육시간 90~100분 내외)

붙임2 청소년복지시설 개요

1 청소년쉼터

□ 사업개요

○ (목적) 가출 등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이용대상 : 9세~24세 가출 등 위기청소년

□ 청소년쉼터 현황(유형별 구분)

('18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쉼터(130)	30	62	38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사회 복귀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최장9개월) 단기보호	3년(1년단위 연장*) 중장기보호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기능	일시 보호, 찾아가는 거리상담지원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 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 학업 및 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청소년쉼터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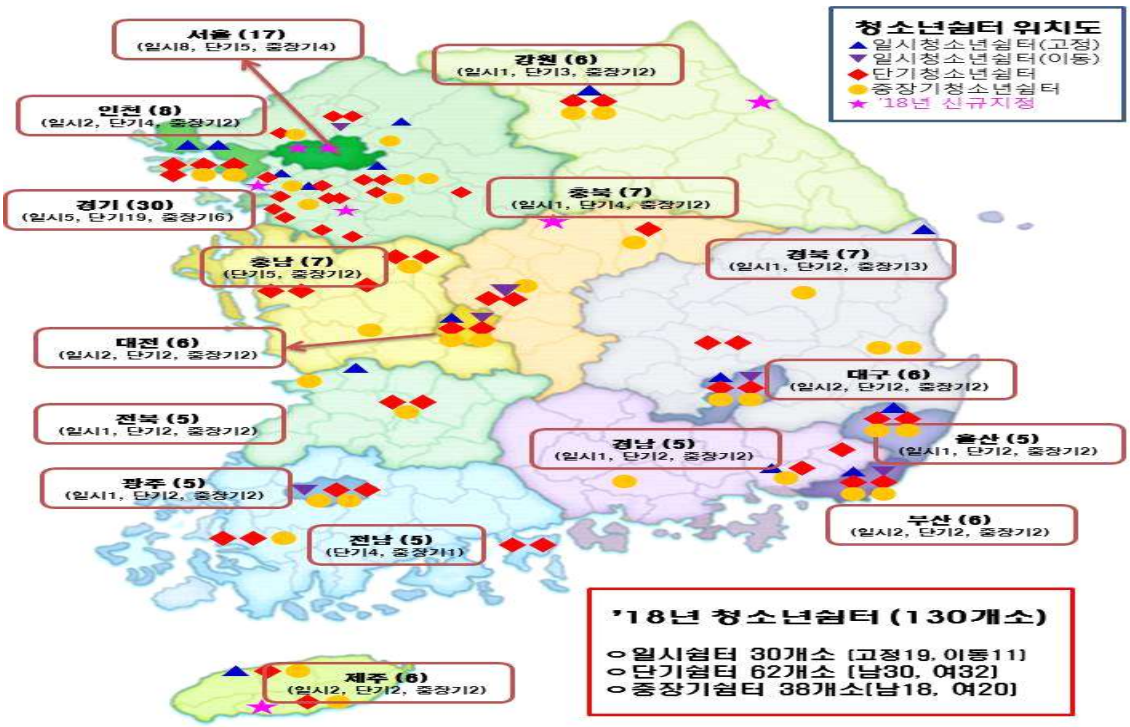
구 분	'16년	'17년	'18년
청소년쉼터 (개소)	119	123	130
입소자 수 (명)	30,329	31,197	32,109

□ 청소년쉼터 지역별·유형별 설치 현황

('18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일시쉼터(30)		단기쉼터(62)		중장기쉼터(38)	
		고정	이동	남	여	남	여
계	130	19	11	30	32	18	20
서 울	17	4	4	3	2	1	3
부 산	6	1	1	1	1	1	1
대 구	6	1	1	1	1	1	1
인 천	8	2	-	2	2	1	1
광 주	5	-	1	1	1	1	1
대 전	6	1	1	1	1	1	1
울 산	5	1	-	1	1	1	1
경 기	30	4	1	8	11	2	4
강 원	6	1	-	1	2	1	1
충 북	7	-	1	2	2	1	1
충 남	7	-	-	3	2	2	-
전 북	5	1	-	1	1	1	1
전 남	5	-	-	2	2	1	-
경 북	6	1	-	1	1	1	2
경 남	5	1	-	1	1	1	1
제 주	6	1	1	1	1	1	1

<청소년쉼터 지역별 분포 현황>



11 국토교통부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한다

-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 동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 '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75개 마을**(신규 102개 포함)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15년 550억원(85개 마을) → '16년 700억원(신규 66개 포함 151개) → '17년 895억원(신규 51개 포함 202개) → '18년 905억원(147개) → '19년 983억원(신규 102개 포함 175개)

□ 균형위는 '지역과 주민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상향식(Bottom-Up)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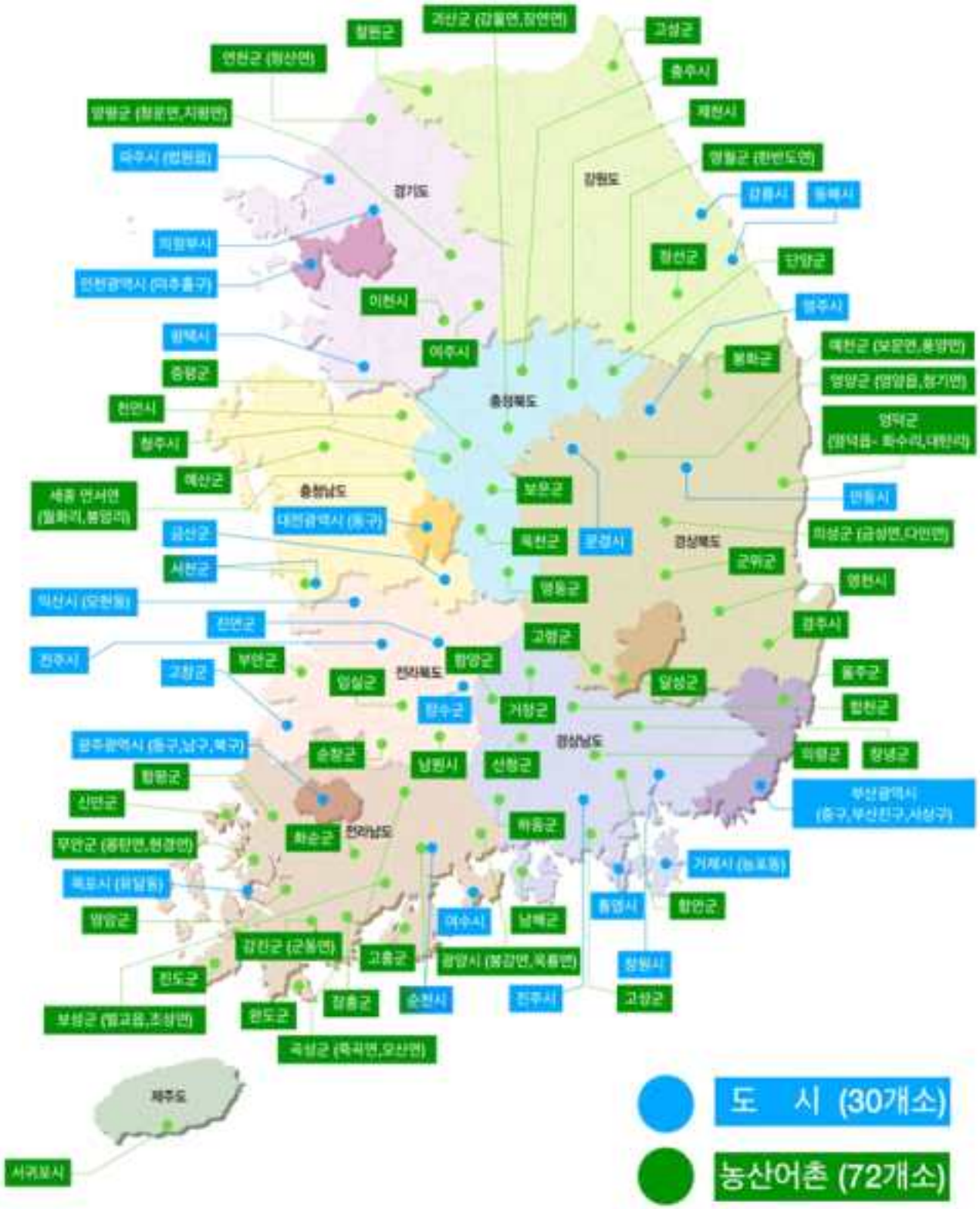
○ 지난해 12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28일까지 **119개 지역**(농어촌 80개, 도시 39개)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3월 한 달 동안 서면평가와 대면(농어촌)·현장(도시)평가를 거쳐 생활인프라 노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102곳을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 2019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

시도	계	농 어 촌	도 시
계	102	72	30
부 산	3	-	중구, 부산진구, 사상구
대 구	1	달성	-
인 천	1	-	미추홀구
광 주	3	-	동구, 남구, 북구
대 전	1	-	동구
울 산	1	울주	-
세 종	2	연서(월하), 연서(봉암)	-
경 기	8	이천, 여주, 연천(청산), 양평(청운), 양평(지평)	의정부, 평택, 파주(법원)
강 원	6	영월(한반도), 정선, 철원, 고성	강릉, 동해
충 북	10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감물), 괴산(장연), 단양	-
충 남	5	천안, 서천, 예산	금산, 서천
전 북	9	남원, 임실, 순창, 부안	전주, 익산(모현), 진안, 장수, 고창,
전 남	21	순천, 광양(봉강), 광양(옥룡), 곡성(죽곡), 곡성(오산), 고흥, 보성(벌교), 보성(조성), 화순, 장흥, 강진(군동), 영암, 무안(몽탄), 무안(현경),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목포(유달), 여수, 순천
경 북	16	경주, 영천, 군위, 의성(금성), 의성(다인), 영양(영양), 영양(청기), 영덕(화수), 영덕(대탄), 고령, 예천(보문), 예천(풍양), 봉화	안동, 영주, 문경
경 남	14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원, 진주, 통영, 거제(능포)
제 주	1	서귀포	-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현황도



□ **2019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의 특징을 보면,

○ (**농어촌 지역**)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졌던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달성군 논공읍 하리,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청주시 가덕면 삼항리, 서천군 화양면 하리,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화순군 도암면 정천리, 경주시 서면 천촌리, 군위군 의흥면 연계리, 남해군 남면 평산리 등

- 또한, 매년 태풍,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되었다.

*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임실군 임실읍 동산리,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리,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산청군 오부면 오전리 등

○ (**도시 지역**) 기존에는 인구밀집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으며,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인해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대전 동구, 금산군 금산읍, 순천시 덕암동, 문경시 점촌1동·5동, 강릉시 주문진읍

** 인천시 미추홀구, 평택시 서정동, 파주 법원읍, 안동시 태화동, 영주시 가흥1동

-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및 담장 노후화 등으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다수 선정되었다.

* 부산 부산진구, 광주 남구, 동해시 부곡동, 서천군 장항읍, 전주시 진북동, 익산시 모현동, 진안군 진안읍, 장수군 장수읍, 고창군 고창읍, 거제시 능포동, 목포시 유달동, 여수시 종화동 등

□ 균형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 원 지원 (국비지원율 :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 예를 들어,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비율 및 슬레이트 지붕 주택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고,

○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균형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

에서도 집수리 및 휴먼케어 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하여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등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위, 관계부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 : 1. '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2. '15~'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참고1 ’19년 새뜰마을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19년 예산) 국비 983억원**

○ ’15~’17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593억원, ’19년 신규사업 390억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3년 이내**(~’21년)**, 도시 4년 이내**(~’22년)

□ **(국비지원) 개소당 50억원 이내,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참고2 '15~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시도	합계	2015년~2017년		2019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계	304	134개소	68개소	72개소	30개소
서울	2		종로, 금천		
부산	13		서구, 동구, 영도, 남구, 북구, 사하(2), 금정, 사상(2)		중구, 부산진, 사상
대구	4	달성	중구, 남구	달성	
인천	7	강화(2)	동구(3), 부평		미추홀
광주	7		서구(2), 남구(2)		동구, 남구, 북구
대전	2		대덕		동구
울산	4		남구, 동구, 북구	울주	
세종	3		세종	세종(2)	
경기	12	파주, 이천	양주, 포천	이천, 여주, 연천, 양평(2),	의정부, 평택, 파주
강원	32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3), 철원, 화천(2), 양구(2), 인제(2), 고성, 양양	강릉, 동해(2), 태백(3), 속초, 삼척, 영월(2)	영월, 정선, 철원, 고성	강릉, 동해
충북	28	청주, 충주, 제천(2), 보은(2), 옥천(3), 증평, 괴산(2), 음성(2), 단양(2)	제천, 영동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2), 단양	
충남	20	보령, 논산, 금산(2), 부여, 서천(2), 예산(3), 태안	보령, 논산, 부여, 홍성	천안, 서천, 예산	금산, 서천
전북	35	정읍, 남원(2), 완주(2), 진안(2), 무주(2), 장수(2), 임실(3), 순창(3), 고창(2), 부안	전주(2), 군산, 익산(2), 김제	남원, 임실, 순창, 부안	전주, 익산, 진안, 장수, 고창
전남	52	여수, 광양, 담양, 곡성(3), 구례, 보성(2), 화순, 장흥(3), 강진, 해남(3), 영암, 무안(2), 함평, 완도(3), 신안(2),	목포, 여수(2), 순천, 장성	순천, 광양(2), 곡성(2), 고흥, 보성(2),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2),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목포, 여수, 순천
경북	41	안동, 영천, 상주(2), 문경, 군위(3), 의성(3), 청송, 영양, 영덕, 고령(2), 성주, 칠곡, 예천(2), 울진	김천, 안동, 영주(2)	경주, 영천, 군위, 의성(2), 영양(2), 영덕(2), 고령, 예천(2), 봉화	안동, 영주, 문경
경남	40	창원, 사천, 밀양, 의령, 함안(2), 창녕, 고성, 남해, 하동(3), 산청, 함양(2), 거창(2), 합천(2)	창원, 진주(2), 통영,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창원, 진주, 통영, 거제
제주	2		제주	서귀포	

1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동해 저도어장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

- 민·관·군 공조체제 강화로 긴급 상황 신속 대응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동해 저도어장이 4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개장됨에 따라, 우리어선의 안전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의 동해해역 활동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면적 15.6㎢인 저도어장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해역 어로한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사이에 있고,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져 있어 월선, 피랍 위험이 상존하여 매년 한정된 기간*에만 입어를 허용하고 있다.

* 조업기간 : 4월 ~ 12월

개장시기에는 어업지도선 및 군·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어 어업지도선은 어장 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군함은 저도어장 외곽경비, 해경은 저도어장 북단 어로보호구역 경비를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저도어장 개장을 위하여 민·관이 참석한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3.21)하였으며, 향후 민·관·군이 협력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저도어장을 개장하는 만큼 어업인은 어장 내에서 조업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 등은 우리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